

2019 정책Brief

전라북도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 본 원고는 기본연구 「전라북도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연구진
조경옥_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주연_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전아람_여성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CONTENTS

I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필요성	02
II 노후준비 실태 및 문제점	04
III 전라북도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실태 및 특징	07
IV 노후준비 지원 및 활성화방안	09

“노후준비는 남의 일”... 은퇴 못하는 ‘늙은 썩거루’들

텍시기사 박모(71)씨는 일흔이 넘은 나이에든 운전대를 놓지 못하고 있다. 네 식구의 가장이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가 둘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 기대어 살고 있다... (중략)... “애들이 밥벌이는 해도 월세까지 내가며 살기에는 빠듯하다... 애들이 결혼 전까지 전세자금이라도 모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탄했다. 박씨처럼 고령임에도 자녀를 돌보는 ‘늙은 썩거루’가 늘고 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이 커졌지만, 자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세대의 노후준비를 방해하는 것이다. (세계일보 2018.5.2.)

I.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필요성: 고령사회 위험과 노년기의 확대

◎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의 심화

- 2060년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4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평균 기대수명은 88.6세로 OECD 최장수 국가 수준에 근접하는 등 인구고령화의 심화 및 가속화 진행 중
 - 65세이상 노인인구: 3,375천명(2000년)→7,381천명(2018년)→12,955천명(2030년)→18,536천명(2060년)
 -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7.3%(2000년)→14.3%(2018년)→24.5%(2030년)→41.0%(2060년)
 - 평균 기대수명 : 61.9세(1970년)→82.4세(2016년)→ 88.6세(2060년)로 OECD 평균수준을 상회

◎ 퇴직이후의 장기화된 노년기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 공포(2013.5) 되었지만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8.6세에 불과함
 - 2060년에는 평균수명이 88.6세에 도달하기 때문에 향후 인생 100세 시대를 구가한다면 60세 퇴직 이후의 시간은 28~40년 정도를 차지하게 됨
 - 이와 같은 점이 시사하는 바는 퇴직 후의 ‘남은 여분’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에 해당함¹⁾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높은 노인자살률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정책이나 관련 재원규모는 확대추세 일로에 있으나 노인빈곤율²⁾은 47.4%로 OECD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임
 - 65세 이상 연령층의 빈곤율은 2012년 51.1%에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등의 제도시행으로 2016년에는 49.2%로 1.9%p 소폭 하락하였지만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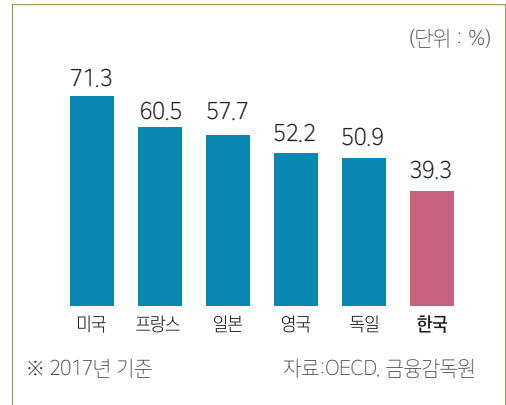
1) 평균수명의 연장과 건강상태의 개선으로 더욱 더 길어진 노년기에 대해 ‘일하기에는 너무 늙고, 죽기에는 젊은 나이인 사람들’로 표현함으로써 노년기가 ‘역할 없는 역할’의 시기로 노인들의 심리적 압박감과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음에 주목함(마크 프리드만, 2007)

2) OECD에서 정의하는 중위소득 50% 미만 비중을 빈곤으로 정의. 일본의 노인빈곤율은 19.4%, 독일 9.4% 프랑스 3.8%이며 OECD평균은 12.6%임

- 노인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54.8명(2014년)으로 OECD 평균 18.4명에 비해 3배 높고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임
 - 2014년과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건강악화(25.2%, 27.6%)와 경제적 어려움(40.4%, 27.7%)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미흡한 노후준비와 낮은 연금 소득대체율

- 안정적 노후를 유지하기 위한 연금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의 60~70%에 해당(OECD 권장사항) 하지만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9%에 불과
 - 연도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1988년 ~1998년에 70%였으나 2028년 이후에는 단 4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 노후소득보장을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경우 저연금으로 인한 노인빈곤이 우려되나 이외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³⁾ 무연금으로 인한 노인빈곤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퇴직 후 연금 소득대체율

◎ 100세 시대 도래, 활동적 노년의 중요성 증가

- 인생 100세 시대가 예견되면서 수동적 노인복지 정책은 은퇴 후 40~50년의 장기화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 노년기의 장기화로 인하여 활동적, 생산적, 성공적 노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WHO는 1990년대 후반 '건강한 노년'보다는 포괄적인 '활동적 노년'의 중요성에 주목(박성정 외, 2014)

〈표 1〉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의 차이

구분	80세 시대	100세 시대
주요목표대상	취약노인, 베이비 붐 세대	전 국민, 특히 장년 중심
정책영역	취약노인의 건강, 주거, 소득영역	정부 주도형을 넘어선 사회적 협약
인식	사회적 부담, 대체의 대상, 보편적 시혜적 복지, 국가책임강조	사회적 자원, 재출발 부양부담을 국가, 개인, 사회가 나눔
정책대응방식	방어적 소극적 대응, 혜택축소를 통한 복지공급조절	적극적 대응, 교육, 근로 등 고령자 참여를 통한 복지 수요조절

자료: 100세 시대 도래의 경제·사회적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3) 국민연금 통계에 의하면 2015년 7월 기준 장기체납자 112만 명, 납부예외자 458만 명, 적용제외자 1,049만 명 등 이들을 모두 합치면 1,600만 명 정도가 여전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2016)

◎ 다차원적 노후준비의 필요: 노후준비지원법 제정

-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노년기 진입(2020년)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경제, 사회, 정서, 신체 등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잡힌 노후준비는 부족
 - 노년기에 경험할 소득단절, 건강악화, 사회적 관계 약화 및 무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에 필요한 준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노후준비 지원 법”이 제정(2015.6.22.)
 - 노후준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배경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공공영역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⁴⁾는 불충분하며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고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방안도 모호한 실정임

II. 노후준비 실태 및 문제점

◎ 노후준비 여부 및 노후준비 주된 방법

- 2000년대 들어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2007년 연금개혁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60%를 넘어 섬
 - 1998년 32.9%에 불과하였던 노후준비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2002년에는 51.4%, 2007년에는 60%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65.4%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2007년 연금개혁(‘1가구 1연금’→ ‘1인 1연금’)을 정점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적 인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임
- 노후준비를 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예금·적금, 사적연금, 기타공적연금, 부동산 운영, 퇴직금 순으로 나타남
 - 1998년에는 국민연금 및 기타공적연금을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7.7%에 불과함
 - 2005년에는 기타공적연금이 제외된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 선택한 사람이 33.9%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53.3%로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노후준비의 주된 방법 (2002-201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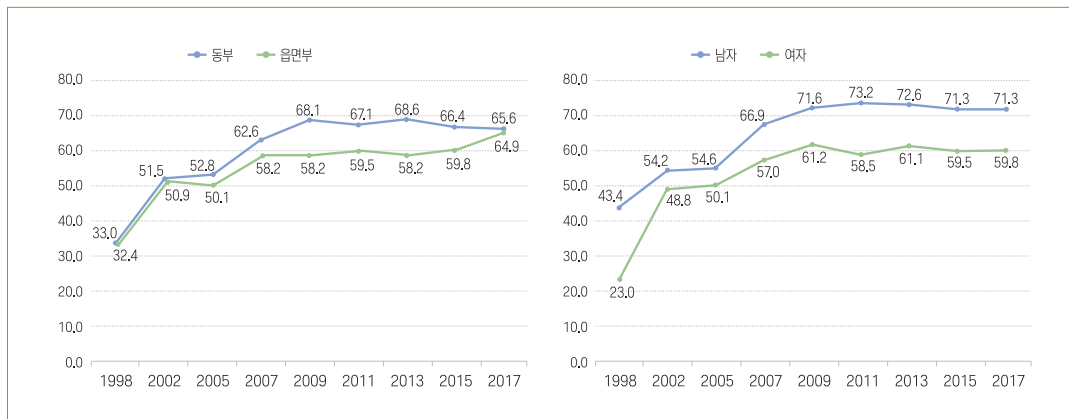
연도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 ¹⁾
1998	7.7		9.6	2.0	11.5	1.9	0.0
2002	28.4		15.9	2.3	13.6	3.8	0.3
2005	33.9	8.9	21.4	3.8	25.1	6.0	0.7
2007	37.1	7.2	18.2	3.2	26.9	6.4	0.9
2015	50.5	8.1	11.4	3.5	21.1	4.9	0.6
2017	53.3	8.8	9.8	3.5	18.8	5.4	0.6

주 : 1) 기타에 '주식 및 채권' 포함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 각년도

4) 국민연금공단은 2003년부터 노후준비서비스(CSA)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내연금' 사이트 구축을 통해 재무영역 중심의 서비스를 하다가 노후준비지원시행(2015.12)으로 국민연금공단의 '행복노후설계센터'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종합적 정보와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 중임

◎ 노후준비 지역별·성별 격차

- 노후준비에 대한 지역별 차이는 동부와 읍면부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성별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 동부가 68.1%, 읍면부가 58.2%로 약 10%p의 높은 격차가 발생하였으나 2013년 이후로는 격차의 폭이 줄어들어 2017년에는 동부 65.6%, 읍면부 64.9%로 지역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 1998년 당시 20%가 넘는 남녀격차는 2002년과 2005년 5%내외로 크게 줄었으나 그 이후 다시 격차가 점점 증가하여 2017년 기준 남성의 노후준비 비율 71.3%, 여성 59.8%로 10%가 넘는 격차를 보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각년도

〈그림 3〉 지역별·성별 노후준비 비율 (1998 - 2017)

◎ 노후생활비

- 최소 노후생활비의 경우 부부는 월 153만원 개인은 월 94만원 이고, 적정 노후생활비의 경우 부부는 월 226만원 개인은 월 135만원으로 나타남
 - 최소 노후생활비는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 적정 노후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함
 - 이와 같은 노후생활비는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공적연금 평균 수령액인 53만원(2017년 기준)을 고려할 때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노후 경제생활의 궁핍정도가 심각함을 미루어 알 수 있음

〈표 3〉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최소 및 적정노후생활비

(단위: 천원)

구분		1차 (2005년)	2차 (2007년)	3차 (2009년)	4차 (2011년)	5차 (2013년)	6차 (2015년)	7차 (2017년)
최소	부부	1,313.8	1,357.4	1,363.1	1,369.2	1,482.3	1,569.4	1,535.6
	개인	856.0	871.4	860.0	806.0	917.0	944.4	944.1
적정	부부	1,897.9	1,971.4	1,957.9	1,931.5	2,089.0	2,159.1	2,261.8
	개인	1,238.9	1,267.9	1,262.1	1,149.6	1,312.2	1,331.5	1,352.4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각 차수.

◎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

- 각 영역별로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한 결과, 건강한 생활습관 > 사회적관계 > 여가활동 > 소득 > 과자산 순으로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62.1점)보다는 여성(63.5점)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65.2점)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50.6점)보다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 (64.2점)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62.3점)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았고 취업자(64.7점)가 미취업자(55.9점)보다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보건사회연구원 노후준비 실태조사 중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종합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 활동	소득과 자산	계(명)
전체	62.8	61.1	73.1	60.2	54.8	100.0 (1,539)
성별	남성	62.1	59.2	70.6	61.5	100.0 (776)
	여성	63.5	63.1	75.6	58.8	100.0 (736)
연령	30대	63.0	59.3	73.0	59.8	100.0 (230)
	40대	64.0	63.0	72.8	60.1	100.0 (518)
	50대	64.2	62.0	73.6	60.6	100.0 (486)
	60대	58.5	58.0	72.7	59.9	100.0 (305)
지역	대도시	62.3	61.4	72.9	59.3	100.0 (701)
	중소도시	63.3	60.4	73.1	61.5	100.0 (716)
	농어촌	63.2	63.9	73.6	57.5	100.0 (122)

주 : 각 영역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는 영역별 지표를 10점으로 표준화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하위영역별 가중치를 곱함. 그 값을 하위영역별 최대 값으로 나눈 후 합산하여 최종 노후준비수준을 구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2016

◎ 노후준비 취약계층으로서 중고령여성

- 55~79세 고령자 중 연금수령자는 2018년 기준 612만 9천명으로 45.6%에 해당하며 연금수령액은 평균 57만원이고 성별로는 남자 76만원, 여자 37만원으로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임
 - 수령금액별로도 성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자는 10만원~100만원 미만에 78.3%가 분포되어 있지만 여자는 61.4%가 10~25만원 미만에 분포되어 있음
 - 제 7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2018)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남 64.7%, 여 35.3%)과 국민연금 수급률(남 64.2%, 여35.8%)에서 남성이 여성의 2배 정도 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연금¹⁾ 수령 현황(55~79세)

(단위: 천명, %, 만원)

구분	연금 수령자	구성비 ²⁾	금액대별 구성비							평균 수령액
			소계	10만원 미만	10~25만원미만	25~5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	100~150만원미만	150만원 이상	
2016	5,379	43.2	100.0	0.9	49.2	24.9	12.3	4.0	8.7	51
2017	5,763	44.6	100.0	0.7	46.6	26.2	13.7	4.0	8.8	53
2018	6,129	45.6	100.0	0.6	42.9	27.6	15.0	4.3	9.7	57
남자	3,181	49.7	100.0	0.5	25.8	29.7	22.8	6.4	14.8	76
여자	2,947	41.8	100.0	0.7	61.4	25.3	6.5	2.0	4.2	37

주 : 1)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성되어 수령한 금액

2) 55~79세 인구 중 연금수령자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보도자료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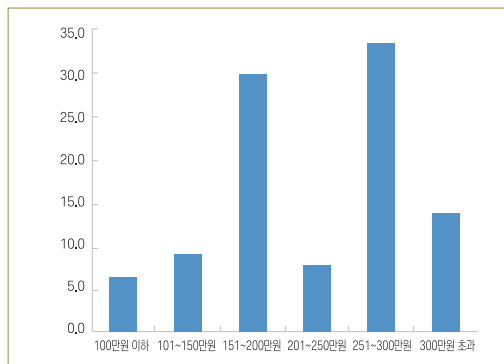
III. 전라북도 중고령여성 노후준비 실태 및 특징⁶⁾

◎ 임금근로자 비율 낮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높아 노후소득보장 취약계층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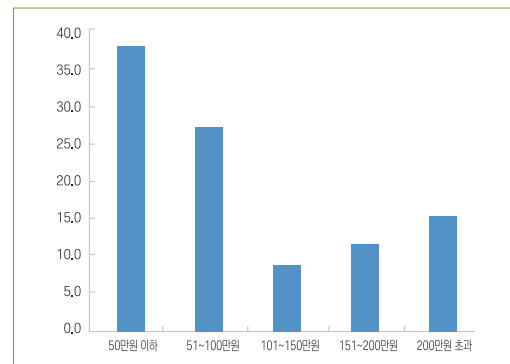
- 전북 중고령여성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낮고 학력수준이 낮아 노후준비 취약계층이 많음
 - 인구총조사(2015)에 의하면, 전북 중고령여성 임금근로자 비율은 50.2%로 전국 평균(61.0%)보다 낮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25.1%로 전국 평균(14.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무소득배우자)되는 비율이 높음
 - 또한, 소득과 학력은 서로 상관성이 높아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고령층의 미취학 학력자는 여성 비율이 높고(남성:28.4%, 여성71.6%) 대졸이상 고학력은 여성이 낮아(남성 66.9%, 여성33.8%) 전북 중고령여성은 노후준비에 취약할 것으로 보임

◎ 공적연금가입률과 수령액이 낮아 노후적정생활비와의 격차가 큰 편임

- 2017년 기준,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 5번째로 국민연금 여성가입자 수준이 높은 편
 - 2015년 전북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총 477,106명으로 이 가운데 남자는 258,171명(54.1%), 여자는 218,935명(45.8%)으로 8.3%p의 성별격차를 보임
 - 2017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총 수는 497,757명으로 이 가운데 남자는 261,704명 (52.6%), 여자 236,053명(47.4%)으로 전체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성별격차는 5.2%p로 완화추세를 보임
- 현재의 연금수령액과 노후예상 생활비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노후의 삶의 질 저하가 예상
 -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노후예상 생활비는 평균 26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노후 예상수령금액은 부부 합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5.0%에 불과하였으며 100만 원 이하가 64.9%로 나타나 격차가 큼
 - 이러한 결과는 위의 <표 5>에서 살펴 본 공적연금 평균 수령액인 53만원을 고려할 때 노후예상 생활비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노후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됨



<그림 4> 노후 예상 생활비



<그림 5> 노후 예상 연금 수령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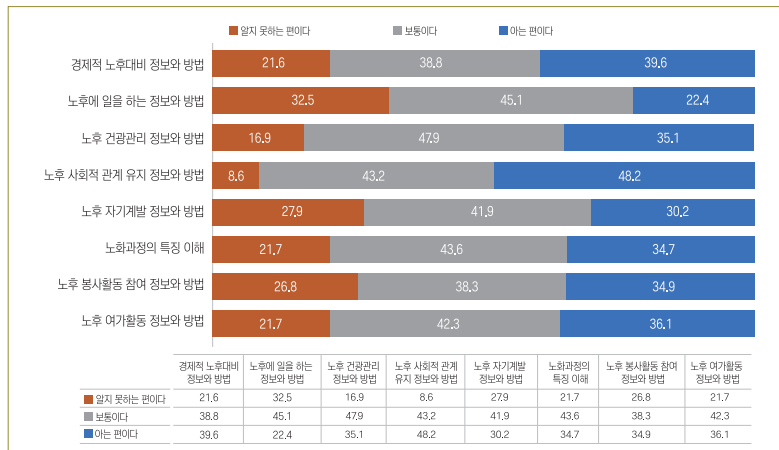
6) 본 장에서 기술하는 전북 중·고령여성 노후준비 실태는 전북에 거주하는 만50~65세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2019.2.21.~3.31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와 17명의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내용임

◎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의식 높아 노후준비 보다 우선

- 중고령여성은 그들의 자녀가 졸업, 취업, 결혼 등 성인기로의 전이를 완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교육비·결혼비용 등의 경제적 부양은 노후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본 실태조사에서 중고령여성의 최근의 관심사는 '자녀의 교육과 취업, 결혼'이 41.1%이고 본인의 '노후준비 관심'정도는 14.9%에 지나지 않았음
 - 또한, FGI 조사에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후는 '자녀의 안정적인 취업과 결혼'으로 인생에서 차지하는 자녀의미와 부양 책임의식이 매우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부모부양의 이중책임을 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서 자녀부양으로 인한 노후준비금 부족과 노후준비 유보가 노후빈곤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

◎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 높지만 전반적인 노후준비 역량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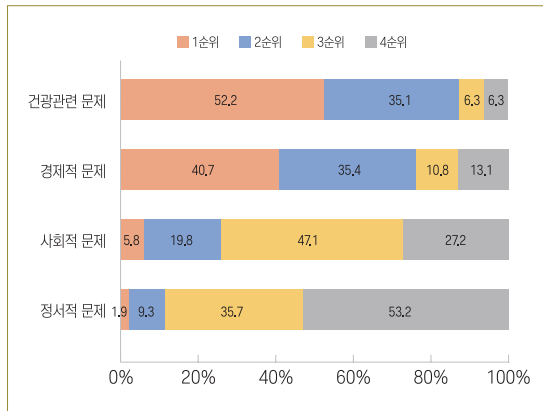
-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노후준비정도는 낮은 편
 -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 척도에서 4.6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총 점수는 100점 만점에 59.1로 매우 낮았음
 -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음'이 48.8%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응답률이 높아 중년기의 경제적 계층의 차이가 이들이 맞이할 노년기에도 계층적 차별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
- 노후준비 역량은 부족하였으며 노후준비 활동으로서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경험' 등은 낮음
 - 경제활동, 건강, 사회활동, 여가 등 노후준비 역량을 구성하는 8개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노후 사회적 관계 유지 정보와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노후에 일을 하는 정보와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 노후준비를 위한 활동으로서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1%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 서비스 접근은 전반적으로 낮았음



〈그림 6〉 노후준비 역량

◎ 노후생활에서 가장 걱정은 ‘건강’, 희망하는 노후 삶은 ‘취미생활’과 ‘소득창출’

- 향후 노후의 삶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는 질병 및 죽음 등 ‘건강관련 문제’에 대한 응답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희망하는 노후생활에 대해서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33.7%, ‘소득창출 활동’이 25.6%로 높게 나타남



〈그림 7〉 노후생활 걱정되는 문제

구분	N	%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129	33.7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98	25.6
종교 활동에 전념하면서 보내고 싶다	47	12.3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46	12.0
학습과 같은 자아계발 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37	9.7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보내고 싶다	22	5.7
가사 및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4	1.0

〈표 6〉 희망하는 노후생활

◎ 노후인식, 노후준비, 노후준비 역량수준 등은 여성의 직업이력과 노동참여 특성과 밀접함

- 노후인식, 노후준비, 노후준비 역량 등에는 학력과 가구소득과 같이 서로 상관성이 높은 변수이외에 중고령여성의 거주지역, 직업이력, 배우자 유무 등의 특성에 따라 집단 내에서도 차이를 보임
 - 학력과 소득이 낮아 노후준비도가 낮고 이로 인한 노후불안도가 높은 집단은 주로 저소득가구와 농촌의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주부들로 이들은 소득활동과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고 주로 남편의 연금에만 의존하여 자립적인 노후준비가 취약한 집단임
 - 경력단절, 무급가족종사자, 전업주부, 재취업과 같은 여성들의 직업이력과 노동참여에서의 특성은 여성들의 노후준비 부족과 낮은 수준을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임

IV. 노후준비 지원 및 활성화 방안

◎ 노후준비 지원 제도의 성인지 관점 반영 필요

- 현행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여성들이 노후빈곤의 심화문제를 겪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노후준비 지원제도에 여성주의적 시각 반영 필요
 -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소득활동과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한 ‘남성은퇴자 모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출산·육아로 경제활동 참여기간이 짧고 임금수준과 연금가입률도 낮은 여성들이 기대수명은 남성보다

길어 노후 여성빈곤 개연성은 높은 상황임

- 따라서 (국민)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연금취약 계층인 여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제반교육, 진단, 상담, 설계 등 여성주의적 시각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후준비 역량을 제고할 필요 있음

◎ 경력설계프로그램 지원과 “은퇴형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 퇴직연령과 노인진입 연령 사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설계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며 소득창출과 사회공헌이 결합할 수 있는 노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는 68.5세(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17년)로 현재 평균 퇴직연령이 55세~57세인 점을 감안하면 노후진입 시 까지 약 10년의 gap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경력설계프로그램 지원 필요
 - 본 설문조사에서는 62.8%가 노후에도 일할 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일자리는 자신의 취미와 여가활동이 소액의 소득창출과 사회적 공헌에 연계되기를 바라고 있었음
 - 퇴직 시기에 받는 수많은 평생교육이 단순히 교육으로 소비되지 않고 교육-소득창출-사회공헌이 결합될 수 있는 “은퇴형 사회공헌 일자리”창출이 필요

◎ 중고령여성 대상의 노후재무교육 제공

-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무연금 문제와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인한 저연금 문제는 노후의 여성빈곤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다차원적인 노후재무교육 제공 필요
 - 2017년 현재 전북 중고령여성 국민연금 가입률은 50% 이하 수준이며, 연금소득 대체율은 39%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연금 평균 수령액(남 76만원, 여 37만원)은 노후 최소생활비(부부 153만원, 개인 94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 노후준비의 부족 원인은 자녀의 졸업, 취업, 결혼 등에 따른 자녀부양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모의 자녀부양 책임에 대한 한계와 경계설정이 필요하며, 자녀부양으로 인한 노후준비금 부족이 노후빈곤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후재무 설계 교육이 필요함

◎ 노후준비 취약계층을 위한 아웃리치 사업

- 경제적, 시간적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저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사업 추진 필요
 - 본 연구결과,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고 농촌거주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노후불안도는 높지만 노후준비도가 낮고 노후준비 역량은 취약하여 노후준비 필요성이 가장 큰 집단으로 나타남
 - 이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지만 소득대체율에 못 미치는 저연금 등으로 인해 노인빈곤의 잠재적 계층에 해당할 개연성이 큰 반면, 현실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무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 outreach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함

◎ 지역기반 여성복지 시설 연계를 통한 노후준비 서비스 접근성 고려

• 중고령 여성의 접근성을 고려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원화 필요

-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같은 공공기관 중심의 제한된 서비스가 이루어져왔으나, 지방의 경우 공공기관 수가 적어 공간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임
-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중고령 여성의 접근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여성새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 각 지역별 여성관련 복지시설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기회 및 대상 확대 필요

◎ 노후준비지원 조례 제정 등 관련 사업 추진 기반조성

• 중고령층 인구비율이 높은 전북지역은 노후준비 및 노후설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마련 필요

- 전북은 높은 고령화율과 노인부양비에 대한 재정부담 등 노인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향후 2025년에는 중고령층(50~65세)인구가 2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의 중요성은 다른 지역에서보다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큼
- 전북은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2017. 4)중에 있고 14개 시군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2019. 1)중에 있어 내실 있는 노후준비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제정이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함

〈참고문헌〉

- 강성호·김유미(2016),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 한국보험연구원
김경아(2015), 국내여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현황과 확대방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젠더리뷰(2015, 여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도균 외(2016), 경기도 베이비부머 노후준비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박성정 외(2014),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병섭(2011), 100세 시대 도래의 경제사회적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송현주 외(2018),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국민연금연구원
정경희 외(2016),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Brief
2019. 09. 20 vol.34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쭈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정책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jthink.kr